

특별기고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제목이 무슨 별레 같다. 사람들은 별레 보면 화들짝 놀란다. 별레 싫어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별레 같은 말을 남뿔 아프게 내뿜는다. 제 뿔을 사는 별레에게는 미안한 표현이다. 평가는 기준을 놓고 따진다. ‘이건 아닌데’, 평가자의 기준일 뿐이다. 노래하는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똥대 나를 평가해?’ 내 길을 갈고 댕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알량한 지식으로 평가하기보다 기회를 줘야 한다.

높은 자리서 뒷집지고 어슬렁

판단은 값어치를 결정한다. ‘좋은 대학 가아지’, 값어치를 돈과 출세에만 둔 건 아닐까? 보잘것없는 판단이 진흙탕 싸움과 아귀다툼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대한독립을 막고 친일에 쓴 지식은 나라를 없애는 판단이고, 내란과 전쟁 선동에 쓴 배움은 나라를 죽이는 판단이다. 제 배 채우는 판단보다 용기를 줘야 맞다. 배웠다고 우쭐거리는 평가로는 이웃을 보듬어 키울 수 없고, 살아봤다며 나이 들ಿದೆ라는 판단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지 못한다. 하

느님도 아니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며 으스대는 평가와 선후배 따지며 ‘내 팔뚝 굵다’고 뽐내는 판단으로 인물을 알아볼 수 없다. 바른말은 이치에 딱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철학을 따지기 힘들고, 총칼 앞에서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다. 의사는 진료실을 나오면 역할이 끝나지만, 환자는 진료실을 나와도 아프다. 법조인은 법정에서 나오면 역할이 끝나지만, 범죄를 당한 사람은 판결이 끝나도 아픔을 담고 평생을 산다. 조언은 도움 주는 말이다. ‘탄수화물 줄여’, 제가끔의 환경을 무시하고 어디서 주위들은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끼워 맞출 수는 없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나’가 아니라 ‘너’여야 한다. 처지에 알맞게 스스로 찾도록 도와야 한다. 바른말이 정의처럼 들려도 실행하기 어렵고, 조언이 지름길 같지만 성공으로 이끌기 힘들다. 바른말이 옳지만 돌려 끼기 당하면 찻집하고, 조언이 길을 터 줄 것 같지만 도리어 어지럽힐 때 많다. 바른말과 조언의 핑계는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려’다. 훈계는 잘 하도록 타이르는 일이다. ‘그러면 안 돼!’, 높은 자리에서 잘잘못만 따지다가 때를 놓친다. 정작 할 줄도 모르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초 치는 놈들 꼭 있다. 아는 척 훈계 ‘질’이나 하는 놈들은 온힘을 다하는 사람들 힘만 뻗다. 더 들도록 만나게 해주고, 더 보도록 알려줘야 한다. 계몽은 모르는 일을 깨우치게 한다. 계몽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려들지만, 계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 그의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내 상황에서 해

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 길이 없는 데 우측통행을 밀어붙일 수 없고, 계엄으로 계몽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이승만은, 대통령이 제 맘대로 하는 임금인 줄 알아서, 4·19혁명(사실은 이승만독재 학생항거운동)의 뜻을 알지 못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이 제멋대로 하는 왕인 줄 착각한 사람도 있다. 높은 사람만 착각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위 자리에 있으면서 더 슬기롭다고 착각한 놈들 많다. 또 다른 이승만, 또 다른 손바닥왕자가 곳곳에 깔려 있다는 말이다.

바른말, 그뻔 맞고 지금은 틀려

충고는 잘못이나 허물을 타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라니까’, ‘대놓고 찌르다고 고쳐지나? 오히려 대들 때 많다. 잘못된 말과 행동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스스로 느껴야 한다. 물어서 깨닫게 하고, 대답으로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맞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리 평판 바조 훈계증을 하더라도 따르는 사람? 드물다. 정말 무서운 별레는 평판 바조 훈계증 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피리의 여인)’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높은 자리에서 뒷집 지고 어슬렁거리는 덩치 큰 여우가 득시글거린다. 밀림의 왕자인 줄 알고! 그래도 마음과 몸으로 살아내는 김장하 어른이 계셔서, 배우며 살맛도 찾는다. 사람들이 나를 별레 보듯 놀라지 않게 평판 바조 훈계증 하지 않도록 애써야겠다.

산불 예방, 미래를 위한 약속

화대와 산불감시원 운영, 봄철 산불 예방캠페인, 마을별 순회 홍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불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각이 잦은 마을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직접 찾아가 대면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운영해 산림 인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야간산불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야간산불 발생 시 출동을 위한 소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비상 대기조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6명씩 3개조를 편성·운영해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과 초기진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더라도 산불의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은 점점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매년 597건의 산불이 발생, 4,00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중 3~4월에 집중된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8%,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29%, 담뱃불 실화 10%로,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아무 때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림과 생활 터전이 훼손된다는 것이고, 복구까지는 몇 년에서 몇 수십 년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하고,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해야 한다.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을 금지하고, 산 주변 화목보일러 연통 사용 시 재저리를 주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의 홍보와 단속만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산불을 막고,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길이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이이다.

‘상춘객’ 안전점검 만전 기하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상춘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 점검은 필수다. 심하게 패인 도로는 없는지 겨우내 얼었다가 녹아내리는 땅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생 각지 못한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관광객에게 지역 이미지 손상의 주범인 바가지 상흔도 절대 금물이다. 해당 지자체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바가지 상흔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상인들의 친절과 상냥함은 기본이다. 특산물을 사고팔 때 한 번 더 웃어 주고 한 번 더 친절함을 보이면 된다. 봄을 즐기기에 기간이 너무 짧다. 머지않아 여름이 다가온다. 이번 주말 많은 상춘객들이 봄나들이에 나설 것이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꼼꼼히 했으면 한다. 이재복 교통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 당언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헌법정신과 국민 주권에 맞는 당연한 결과다. 공당의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동안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파기환송을 하고 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의 공판기일을 잡은 것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이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면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7일 재판부에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후보의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제라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전광석화 같은 고법의 움직임은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법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후보의 다른 사건 역시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다. 사법부가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에서 배우자

지난 5월 1일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에 3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220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혹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터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게 당연하다 치부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1(아이)-정원’을 주제로 14종의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순천시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가능했다. 특히 연휴 내내 관람객이 끊이지 않았는데, 4일에는 올해 1일 최다인 12만 6,000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도심 전체가 들쭉일 정도였다.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도 대부분 만족감을 표했고, 다음에 꼭 다시 찾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더욱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처음부터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시작은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다. 6개월간 총 23개국

참가했으며 정원은 83개로 조성됐다. 하지만, 당시 개장 초기까지만 해도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심지어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 여론도 높였다. 하지만,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박람회 이후 가치를 높여 나갔다. 이듬해인 2014년 순천만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개장한 데 이어 2015년 9월 5일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다. 처음엔 선진국의 사례를 본뜨기에 급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천만의 특색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했고, 2023년에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98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은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이 만든 결과다. 광주전남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런 성공 사례가 더욱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함께 지키는 어린이 교통안전

발언대



김정원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번히 나타나고 있다. 매년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 중이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임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란색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펜스) 확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등으로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 임무를 쉽게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더 주의 깊게 다가가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봄 축제를 재 만끽하기도 전에 대재앙을 낳은 산불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봄축제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연기하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봄꽃 축제 현장에는 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몰릴 것이다. 행사주최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먼저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최대한 신경 써야 한다. 관광지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박 철 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 경 남	주필 이 종 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